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기획 대선주자 집중토론회

자유한국당 홍준표

“청년·서민이 희망 갖는 나라 만들것”



16일 서울시 영등포구의 경남도 서울사무소에서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지경 광주일보 서울취재본부 정치부장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언론사 기자들이 대선주자 검증 초청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홍준표 경남지사의 표정은 활기차고 밝았다. 최근 보수진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치적 위상을 보여주는 듯했다. 16일 오전 경남도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언론사의 홍 지사 초청 공동토론회는 그의 우파적 시각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네티어를 꼭 매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며 느슨하게 맨 네티어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말 문을 연 홍 지사는 내내 특유의 쾌활한 모습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받아냈다.

-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 최순실 사태를 거치면서 탄핵이 인용되고 국가적 대혼란이 나타났다. 시대정신이라고 굳이 말한다면 이 천하대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이다.

- 왜 홍준표여야 하나.

▲ 대통령이 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다. 국회의원 4선을 하면서 10여개의 상임위원회에서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했다. 또 ‘하방’해서 지방행정을 경험했다. 4년 동안 한국 최초로 빛 없는 도정을 만들었다. 1조 3488억원에 이르던 경남의 악성부채를 땅 한 평 팔지 않고 재정개혁·행정개혁·내부개혁만으로 다 갚았다. 그리고 앞으로 50년 미래 먹거리 준비를 다했다. 사전·진주에 우주항공산업단지를 금년에 착공한다. 그리고 밀양에 나노테크국가산업단지도 착공할 것이다. 그리고 거제에 100만평을 매립해서 해양플랜트산업단지를 착공할 것이다.

- 개헌에 대한 입장은.

다음 대통령 될 사람에게 개헌 약속 받아야

보수단일화로 4자구도 만들면 승산 있어

좌우갈등은 정책·인물 대응으로 완화 가능

▲ 87년 체제를 종식하는 것은 국민의 바람이다. 그러나 53일 남았다. 현실적으로 (대선 전) 개헌은 어렵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이 국민에게 개헌을 하겠다 확실히 약속을 해야 한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담보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다음 정권 집권 초부터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분권형 대통령제를 원하는 기류가 많은데.

▲ 대통령 권한을 분할하는 것에 대해 국민 상당수가 동의하지만 이런 체제를 과연 국민이 수용할지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

- 당론과 많이 다르다.

▲ 당론은 아직 보지 못했다.

- 대북정책 기초와 미국·중국 등 외교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은.

▲ 대북 장구는 폐쇄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북한 핵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를 해야 한다. 북한에 핵공갈을 당하면서 불안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나, 91년도에 철수했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자체 핵개발도 검토해야 한다. 핵균형을 이뤄야 핵이 있는 나라들끼리 전쟁이 불가하다.

- 사드배치는 찬성하는가.

▲ 사드는 대선 전에 배치해야 한다. 실효성 문제라기보다는 한미동맹을 군사적으로 강화한다는 상징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 지역불균형이 심각하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 지방에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력(산업기반)이나 문화, 의료시설이 구비되면 된다. 나아가 중앙권력을 지방권력으로 많이 이양하면 기업도 굳이 수도권으로 갈 필요가 없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현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전에는 촛불은 정권탈취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 지금 생각도 같다. 정치적으로 탄핵감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적 결정을 할 만하게 증거가 있었다. 지금 유죄 확정된 게 하나도 없다. 25분 동안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판결문 읽는 것을 봤다. 다 들어보니까 잡담을 훈계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 판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러나 승복할 방법이 없다.

- 경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보수 분열 상태에서 본선 승리가 어렵지 않나.

▲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후보 간의 단일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4자 구도를 만들면 승산이 있다.

-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합쳐질 수 있을까.

▲ 지금은 별거 중이라 서로 온갖 욕을 다한다. 그런데 정권 넘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나. 정당 통합은 어렵다. 후보끼리 통합해야 할 것이다.

- 국민의당과의 연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고 본다. 김종인 전 대표의 역할을 주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 반문재인 연대에 대한 생각은.

▲ 반문재인이라는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 난 문재인 후보를 절대감자라고 보지 않는다.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광적인 지지자만 답하고 있다. 4당의 후보가 확정된 이후 한 여론조사가 진짜 여론조사다. 그때 문 후보가 50%를 얻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대통합을 위한 구상은.

▲ 좌익·우익, 민주·반민주, 좌파·우파는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이다. 인위적으로 없앨 수는 없다. 좌우 갈등은 정책과 인물 대응으로 완화할 수 있다.

-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지금 대한민국 청년이나 서민은 돈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다. 꿈이 없기 때문이다. 청년, 서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취재단=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도 새뜰마을사업 8곳 선정 ‘전국 최다’

취약 농어촌 생활개선 국비 지원

전남도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2017년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에 농어촌 8개 마을이 선정됐다. 전국 최다로, 도민 1128명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리도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설치, 소방도로 등 주민 안전시설과 주민 역량 강화, 휴먼케어 등 지역 주민 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마을당 최대 국비 50억원이 지원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전국 농어촌 67개 마을, 도시 34개 마을의 신청을 받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서면평가와 대면·현장평가를 거쳐 농어촌 35개, 도시 16개 마을을 선정했다.

선정된 전남지역 새뜰마을은 ▲신안 안태면 당사마을(지원금 30억원) ▲완도 노화읍 구목마을(23억원) ▲강진 강진읍 남포마을(22억원) ▲장흥 대덕읍 산외동(21억원) ▲해남 옥천면 대산마을(20억원) ▲여수 화양면 대옥마을(14억원) ▲곡성 삼기면 금반마을(13억원) ▲무안 몽탄면 덕암마을(13억원)이다. 읍면 소재지와 거리가 먼 낙후마을이나 섬 지역 등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마을들이 선정됐다.

김정선 전남도 건설도시국장은 “새뜰마을 사업을 통해 마을의 가장 취약하고 기본적인 생활환경들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며 “전문가 컨설팅 등 새뜰마을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도 도립미술관 특별교부세 23억 확보

전남도가 ‘전남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23억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추가 확보했다. 이번 증액으로 고가의 소장품 구입 등이 가능해져 미술관의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16일 “지난 3일 구례에서 열린 ‘인구감소 대응 제1차 지역순회 대토론회’에서 이낙연 전남지사가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특별교부세를 직접 건의한 결과 지원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건립 공사비는 450억원(국비 160억원 원 도비 170억원 시비 120억원)에서 473억원으로 증액됐다. 전남도립미술관 건립은 예정 전남의 위상에 걸맞

은 사업으로, 전남지역 미술 발전을 견인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남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도립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국제설계공모로 선정된 설계사와 기본·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착공 예정이다.

전남도립미술관은 광양읍 구 광양역사 1만7000㎡ 부지에 연면적 1만2000㎡,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설계 중이다. 주민들의 다양한 미술문화 체험을 위해 전시실을 비롯한 교육시설, 어린이 체험 전시, 편의 공간 등을 갖춘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재외국민도 조기 대선 열기 속으로

동포대상 신청방법 등 소개 활기
재외투표 4월 25일~30일

헌정 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일이 5월 9일로 정해지면서 재외국민의 선거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각국 동포신문들은 국외에서 투표하는 재외선거인 등의 신고·신청 방법 등을 소개하는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미주한국일보·중앙일보는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은 선거일 40일 전인 오는 30일까지 중앙선거위 홈페이지, 공관 방문,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4만여 명은 영구명부제가 도입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공지했다.

전원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 지역인 중국을 대표하는 재중국한국인회와 현지 동포

신문들은 국외부재자 신고에 대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는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9세 이상 국민이 해야 한다. 신고는 선거위 홈페이지(ova.nec.go.kr)에 접속해 지정된 절차를 따르면 된다. 신고서 작성 후 ‘신고결과조회’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재외투표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신고 및 등록, 투표방법 등에 대한 관심은 선거 참여 독려로 이어지고 있다. LA 한인회,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 남가주 한인목사회, 미주3.1여성동지회 등 미주지역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LA 지역 10여 개 단체는 현지시간으로 14일 조기대선에 따른 유권자 등록 및 선거 참여 캠페인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